

기업 경영의 저해요인과 정책대안 한국리서치-매일경제 공동조사

여론조사본부 본부장 심재웅 전무

우리 기업의 경영과 발전에 무엇이 가장 심각한 저해요인인가? 기업이 겪는 저해요인을 극복하는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매일경제와 한국리서치는 기업발전을 가로막는 저해요인과 정책대안을 기업체 임직원, 경제연구기관의 전문가, 그리고 대학교수 등 236 명을 대상으로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는 기업경영에 가장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는 항목을 각 응답자가 4 개씩 선정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각각의 요인을 가장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선정한 이유와 그 저해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에 대한 의견을 개방형으로 기술하여 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기업경영의 가장 큰 저해요인]

기업인, 전문가, 대학교수들이 인식하는 기업경영의 가장 심각한 저해요인은 기업인, 전문가, 대학교수 그룹간에 차이가 있다. 기업체 임직원과 경제연구기관의 경제, 경영 전문가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기업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인식하는 반면, 대학교수들은 '대기업의 오너경영'을 기업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보고 있다.

100 대 기업의 임원급을 포함한 기업인들은 '과도한 기업규제'(16%) 다음으로 '강성노조'(14%), '사회 일반의 반기업정서'(12%), '반시장법을 양산하는 국회'(11%)의 순으로 인식하여 정부, 노조, 정치권 등 기업을 둘러싼 기업 내, 외부의 제도적, 정치적 요인이 기업발전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주는 저해요인이라고 인식한다.

경제분석기관과 민간경제연구소의 경제, 경영 전문가들은 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정부의 과도한 기업규제'(19%), '반시장법을 양산하는 국회'(13%), '정책당국의 정치금융'(13%)의 순으로 정부, 정치권, 정책당국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본다.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분야의 대학교수들은 우리 나라 기업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은 '오너경영 체제'(16%)와 '강성노조'(13%) 등 기업 내부의 경영구조와 노사간의 문제라고 인식한다.

[정부의 기업규제 요인]

기업규제를 기업발전의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선정한 기업인과 전문가들은 정부의 기업규제에 '과도하고 불합리한 요소'가 많고(24%), 그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며'(24%),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다'(12%)는 점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었다. 정부규제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규제완화 및 철폐'(48%)가 우선되어야 하며, '규제정책이 시장경제와 균형을 맞추어야 하고'(15%), 향후 '정부 부처의 역할을 재검토'하며(8%), 기업과 정부간에 '소통을 위한 의견의 수렴'이 필요하다(7%)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강성노조 요인]

강성노조가 우리 나라 기업의 발전에 저해요인이라고 선정한 기업인과 전문가들은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이기주의와 강성노선'(42%)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고 강성노조로 인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17%), 고임금, 고비용, 저효율 등 '낮은 생산성'을 유발하는(14%) 요인 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강성노조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성노조의 활동을 법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26%)는 강경한 입장과 '노사간에 동반자로서 상생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22%)는 온건한 입장 모두 제시되었고 '노동시장의 유연화'(20%)와 같은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오너 경영체제 요인]

우리 나라 기업발전의 또 다른 저해요인으로 선정된 오너경영체제는 '경영권 세습의 부작용'(31%)과 '오너 중심의 독단적인 경영 스타일'(29%)로 인해서 '전문성이 약한 후진적 기업경영'(27%)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오너 중심의 후진적 기업경영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 전문경영인, 이사회, 감사 등 '기업 내 의사결정기구의 권한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35%), '경영권 세습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강화'하며(15%),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감시와 제재'(13%)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12%)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회 일반의 반기업정서]

기업인들은 우리 사회 일반의 반기업정서도 기업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반기업정서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39%), '대기업과 부자를 죄악시키는 풍토'(19%)와 사회 일각에서 '반기업정서를 부추기는 것'(19%)도 심각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기업정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35%)이 가장 중요하고 기업인도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고'(22%),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야(13%)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회와 정치권의 요인]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국회 등 정치권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여, 야간 정쟁이나 이념적 대립'이 기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고(17%) '반시장주의적 법안'이나(17%) '포퓰리즘적인 복지정책이나 분배정책'(16%)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국회 등 정치권이 기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19%),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공개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11%) 것이 필요하며 국회가 입법하는 '법률안에 대한 사전의견수렴 제도'를 확대'해야(10%)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정치금융의 부정적 요인]

정치금융은 특히 경제, 경영 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우리 나라의 기업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정치금융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금융권의 낙하산 인사'(49%)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고 정, 관계 지배유착구조하에서 '금융권의 자율성이 부족한'(36%) 것도 정치금융의 문제가 심각한 이유로 지적되었다.

정치금융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권의 '낙하산 인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여야 하고(43%), 정치금융에서 금융권이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30%)는 과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일부 시민단체의 부정적 영향]

설문에 응답한 기업인과 전문가들은 우리 나라의 기업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일부 시민단체의 문제도 지적하였다. 특히 '기업의 꼬투리를 잡아 정치 문제화하거나'(36%), '대안 없는 일방적 주장이나 비판을 하는'(36%) 경향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일부 시민단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검증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58%) 가장 많이 제시되었고 '시민단체의 중립'을 담보하는 방안(13%)과 시민단체가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8%), '토론과 소통을 활성화'하여야(8%) 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기업경영 저해요인과 정책대안: 종합 요약]

기업인, 경제전문가,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기업 발전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주는 저해요인과 그러한 요인을 선정한 이유 및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다음 표와 같다.

기업발전 저해요인	선정이유	정책대안	
정부의 기업규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대대적인 규제완화 및 철폐	시장경쟁과 균형있는 규제정책
강성노조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이기주의	강성노조 법적 규제 강화	노사간 상생방안 모색
무소불위 기업 오너	경영권 세습 부작용	주주, 이사회 권한 강화	경영권 세습 제도적 규제 강화
사회 일반의 반기업정서	기업활동의 위축	기업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정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
반시장적인 국회와 정치권	여야간 정쟁, 반시장적 정책	입법의 전문성 강화	국회의원 의정활동 공개 및 평가
정치금융	금융권 낙하산 인사, 자율성 부족	낙하산 인사 제도적 방지	금융의 자율성 보장
일부 시민단체	기업 꼬투리 잡기, 대안없는 비판	시민단체 검증시스템과 책임강화	시민단체 중립성 담보, 대안제시

[조사방법]

우리 나라의 기업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요소를 조사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기업체 임직원, 경제분석 연구소 소속의 경제, 경영 전문가, 사회과학 분야의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2014년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컴퓨터를 이용한 웹 조사(CAWI)와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항목은 기업경영에 가장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는 항목을 각 응답자가 4 개씩 선정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저해요인으로 선정한 이유와 그 저해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에 대한 의견을 개방형 응답으로 기술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100 대 기업의 임원급을 포함한 기업인 110 명, 경제기관 및 민간경제연구소 소속의 경제, 경영 관련 박사급 연구원 21 명,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분야의 대학교수 105 명 등 236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모두 944 개의 기업발전 저해요인을 선정하였다.

기업경영 저해요인과 정책대안 조사결과는 2015 년 1 월 8 일 자 매일경제신문에 보도되었다.

조사관련 문의:

한국리서치 심재웅 전무

직통전화 02-3014-0080 이동전화 010-3767-7008

이메일 jwshim@hrc.co.kr